

	<h1>보 도 자 료</h1>	2022. 3. 7(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尹 장모 최 씨, 연 1,460% 살인적 차명 사채 돈놀이 정황

- 현안대응TF,尹 장모 최 씨 동업자 안 씨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 최 씨가 차명으로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상환 받기로 약정, 연 1,460%의 살인적 차명 사채 정황 포착
- 김승원 단장, “하루 이자만 4%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 “검사 사위(尹 후보)로부터 법률 자문 받아 차명·부동산매입약정서 등 다양한 법률수단 동원하였나.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尹 후보’ 가담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법정 최고이율 연 30%의 48배가 넘는 1,460%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 씨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② 피고인 최OO, 장OO은 금전거래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 안 씨 최은순)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 OO인베스트먼트와 이OO 사이에 2013. 1. 29. ‘OO인베스트먼트는 2013. 2. 22.까지 계약금 4억 1,000만 원과 비용 9,000만 원 포함 배당금 일금 5억 원을 합산하여 합계 10억 원을 이OO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입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차용증과는 다른 형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 씨는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 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하였다.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하루 이자가 4%, 월율 이자만 40%에 달한다. 월율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사채다.

는 치밀함도 보였다. 최 씨는 아들 친구인 이OO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동업자 안모씨도 2013년 1월 29일에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여러 법률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률문서를 최 씨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사위로 있던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자제한법 처벌에 대한 회피 방안을 적극적으로 자문받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사위가 법률전문가인 현직 검사인데,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하였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 씨가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을 철저히 감추어 온 이유다.

이에 대해 현안대응TF 김승원 단장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

김 단장은 또 “장모 최 씨가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명을 동원하고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작성했다.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나.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장모 최 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尹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최 씨는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하